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과 제도 활성화 방안의 쟁점 및 고려사항

예산분석총괄과 유민호 분석관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개요

▪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되어, '24.6월부터 10년물·20년물 발행 시작
- 다만,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여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5년물 발행을 시작하였으며, 2026년 4월부터는 3년물도 발행할 계획

[표 1] 국고채와 개인투자용 국채 비교

구분	부담 주체	매입 자격	금리 결정	소유권 이전	사무처리기관
개인투자용 국채	공공자금 관리기금	개인 한정	사전 공고	불가 (중도환매는 가능)	한국예탁결제원
국고채		제한 없음	공개시장	가능	한국은행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 2024」, 2025.4.

▪ 개인투자용 국채의 핵심은 안정성, 복리효과와 가산금리 혜택 및 절세효과

-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국채로서 사실상 무위험 자산
 - 「예금자보호법」상 1억원 한도 내에서만 보호되는 시중 은행 예금과 달리, 매입 금액 전액에 대해 국가가 상환 의무
- 만기 보유 시 높은 가산금리 부여 및 연복리가 적용되어 장기투자 시 수익 극대화
-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효과 동반
 - 매입액 총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단, 2026년 4월 도입 예정인 3년물은 분리과세 혜택 적용 X)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

▪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총 1조 2,057억원 발행

- 전년 대비 0.5조원 증가, 연간 발행계획(1.3조원) 대비 0.1조원 미달

[표 2]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이후 연도별 발행 실적

발행년도	5년물		10년물		20년물		발행액 합계
	발행한도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액	
2024	미발행		7,900	5,979	2,600	1,397	7,376
2025	6,600	7,502	4,900	3,793	1,200	762	12,057

주: 2024년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시작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상품별로는 5년물의 발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장기 보유에 따른 부담이 있는 10년물·20년물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이 지속**

- 다만,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25.10월부터 5년물도 청약 미달이 발생하는 등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가 부진

※ 2026년 1월에는 가산금리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청약 수요 호조로 발행한도를 모두 충족

[표 3] 2025년 월별·상품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

(단위: 억원)

발행년월	5년물		10년물		20년물		발행액 합계
	발행한도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액	발행한도	발행액	
2025.1.	미발행		800	737	200	131	868
2025.2.			800	432	200	73	505
2025.3.	600	790	500	353	100	57	1,200
2025.4.	700	912	400	240	100	48	1,200
2025.5.	800	933	400	314	100	52	1,299
2025.6.	900	1,095	400	231	100	51	1,377
2025.7.	900	606	400	262	100	63	931
2025.8.	900	945	400	345	100	83	1,373
2025.9.	900	932	400	316	100	72	1,320
2025.10.	900	511	400	236	100	54	801
2025.11.	900	778	400	327	100	78	1,183
2025년 합계	6,600	7,502	4,900	3,793	1,200	762	12,057
2026.1.	900	900	400	400	100	100	1,400

주: 1. 2025년 12월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2. 청약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목별 발행한도를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금리는 연말 국채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의 미세조정을 통해 합산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를 일정하게 유지**

- '25.7월부터 11월까지 각 연물별 합산금리가 동일하며,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따라 '26.1월부터 장기물 가산금리가 대폭 인상

[표 4] 2025년 월별·상품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금리

(단위: 연 %)

발행년월	5년물			10년물			20년물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2025.1.	미발행			2.665	0.500	3.165	2.750	0.500	3.250	
2025.2.				2.840	0.350	3.190	2.770	0.500	3.270	
2025.3.	2.685	0.350	3.035	2.840	0.350	3.190	2.705	0.500	3.205	
2025.4.	2.680	0.350	3.030	2.830	0.350	3.180	2.700	0.500	3.200	
2025.5.	2.440	0.590		2.700	0.480		2.560	0.640	3.200	
2025.6.	2.480	0.550		2.695	0.485	2.715	0.485	3.200		
2025.7.	2.655	0.375		2.885	0.500	3.385	2.825	0.675	3.500	
2025.8.	2.625	0.405		2.835	0.550		2.805	0.695		
2025.9.	2.580	0.450		2.820	0.565		2.865	0.635		
2025.10.	2.585	0.445		2.835	0.550	2.805	0.695			
2025.11.	2.735	0.295		2.885	0.500	2.945	0.555			
2026.1.	3.245	0.300		3.545	3.410	1.000	4.410	3.365	1.250	4.615

주: 2025년 12월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 규모는 248억원

- '25.7월부터 12월까지 10년물 167억원, 20년물 81억원 중도환매
- 다만, 2026년 1월부터 신규 발행물의 금리가 크게 인상되면서, 기존 보유분을 매도하고 신규물로 갈아타려는 중도환매 수요가 늘어날 전망
- ※ 참고로 중도환매 시에도 원금이 100% 보장되고 발행일부터 중도환매 시까지의 이자가 지급되나, 가산금리나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음

[표 5]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 현황

(단위: 억원)

연월	10년물	20년물
2025.7.	15	17
2025.8.	24	16
2025.9.	37	9
2025.10.	29	17
2025.11.	35	13
2025.12.	27	9
합계	167	81

주: 1. 2024년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시작
 2. 해당 국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므로 5년물은 2026년 4월부터 중도환매 가능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현황

- '24.6월부터 '26.1월까지 누적 투자자 수는 42,103명이며, 1억원 초과 투자자는 6,633명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

[표 6] 개인투자용 국채 누적 투자금액대별 투자자 수('24.6~'26.1)

투자금액	투자자수(명)	비중(%)
1천만원 이하	17,603	41.8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1,506	27.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361	15.1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016	4.8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959	9.4
2억원 초과	658	1.6
합계	42,103	100.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6년도
발행계획 및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

▪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 2026년 1월 1,400억원을 포함, 연간 총 2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
- 2025년 연간 발행계획 대비 +0.7조원, 실적 대비 +0.8조원
- ※ 청약 수요, 재정자금·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연중 발행 총량 조정 가능
- 1월 발행 표면금리는 '25.1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로 결정
-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 (5년물)3.545%, (10년물)4.410%, (20년물)4.615%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재정경제부, 2025.12월)

-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보유 부담 완화, 투자방식 다양화 등을 통한 투자 유인 제고 목적

[표 7]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개선 사항	주요 내용	시행 시기
① 3년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연물에 비해 만기 부담이 적은 3년물을 신설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합 등을 고려,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하고 분리과세 혜택은 미적용 	'26.4.
② 가산금리 대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50~70bp¹⁾ 수준의 가산금리를 100bp 이상으로 확대 (10년물·20년물 대상) 	'26.1.
③ 10년물·20년물 퇴직연금 투자 대상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판매대행기관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해 10년물·20년물에 한하여 매입 허용 	'26.下(예정)
④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기시 원금·복리이자를 일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하여, 표면이자를 1년 단위로 지급하고, 전용계좌의 이자에 한정하여 중도인출 허용 	3년물: '26.4. 그 외: '26년 중

주 1) bp(Basis Point): 금리나 수익률의 단위로, 1bp는 0.01%포인트를 의미(예: 100bp = 1%p)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고려사항

▪ 다만, 정부의 활성화 방안은 국채 수요 기반의 다변화 및 국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 및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 ① 3년물 도입에 따른 제도 취지 훼손 및 자원조달 안정성 저해
 - 3년물에 청약 수요가 집중될 경우, '국채의 만기 구조 장기화'라는 거시적 재정 운용 목표 및 '장기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와 배치되는 측면
 - 원칙적으로 단기물 비중 확대는 **잡은 차환 발행을 유발하여** 자원 조달 안정성을 저해
- ② 가산금리 대폭 상향에 따른 재정부담 및 시장 왜곡
 - 인위적인 가산금리 설정은 국채 발행에 수반되는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조달비용 최소화**'라는 국가채무관리 기본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국채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부여할 경우, 시중 유동성을 국채가 흡수하는 **구축(Crowding-out)**효과로 인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배치될 우려
- ③ 이표채 방식 전환에 따른 자산형성 기능 약화 및 행정비용 발생
 - 매년 이자를 수령하여 소비할 경우 복리효과 반감 및 최종적인 자산 축적 규모가 감소하여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 → 사실상 공자기금을 기반으로 **국가가 판매하는 '정기예금' 성격으로 전환**되는 측면
 - 이표채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며, 매년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결론

- 정부의 제도 개선안은 국채 수요 확충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으나,
 - 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자 비용 관리), ② 민간 금융상품(예금 등)과의 경합에 따른 구축 효과, ③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개인투자용 국채는 본질적으로 국채의 일종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국가채무로서 **조달 비용의 효율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필요
 - 발행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금리와 괴리된 높은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부여할 경우,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우려
- 따라서 단순한 발행 물량 확대보다는 **시장 금리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 원칙을 확립**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